

종합·해설

대선 핵심 정책 '5당 5색'

금산분리·부동산 보유세 시각차  
사형제 폐지·고교평준화 유지 동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17대 대선에 참여하는 5개 정당의 핵심 정책에 대한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공개됐다.

◇총론 = 양대 정당의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입장차가 뚜렷했다.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신당과 중도보수 성향의 한나라당 사이에 표방하는 이념의 차이만큼이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도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5대 분야 중 경제·민생,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당은 대부분 질문에 입장이 달랐다. 특히 금산분리, 부동산 보유세, 수도권 공장증설, 기차실 통폐합, 대북지원,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서 양당은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반면 사형제 폐지, 토지공개념 강화, 이중국적 허용, 고교평준화 정책, 국립대학 법인화 등 사회·복지 및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대체로 입장을 같이했고, 각론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 12일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기치로 합당을 추진키로 선언한 대통합신당과 민주당은 상당 부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금산분리, 토지공개념 등에서 상반된 견해를 피력해 합당을 하더라도 정책조율이 필요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경제·민생분야 = 금산분리 원칙 유지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자원배분 방지, 공정한

정당	■ 정당별 핵심공약 입장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기업의 은행 소유금지	찬성	조건부반대	찬성	조건부반대	조건부반대
수도권 공장 신설규제	조건부찬성	조건부반대	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사형제 폐지	찬성	조건부찬성	찬성	찬성	조건부찬성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조건부반대	찬성	찬성	조건부반대
고교평준화 유지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반대
대통령 5년단임제 유지	반대	기타(광범위한 개헌 논의 필요)	반대	반대	반대
기차실 통폐합 재고	조건부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행정복합도시 계속 추진	찬성	찬성	조건부찬성	찬성	찬성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조건부반대	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반대

경쟁 보장 측면에서 금산분리 유지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전제로 단계적 완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찬성,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완화 입장을 피력했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로는 신당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는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환경 분야 =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신당과 한나라당 모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신당은 평준화 근간을 유지하면서 EBS 수능강의와 방과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뒀고, 한나라당은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기숙형

공립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 실시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다양한 고교 전환을 강조했다.

◇정치·행정 분야 = 5년 단임제 유지문제와 관련, 신당은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중부제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 논의를 17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해 임기초 확정하자고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경제제도 등 광범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에 대해 5개 정당 모두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외교·안보 분야 = 신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였다. '대북경제지원을 북한에 인건문제와 연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합신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한나라당은 찬성론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무분별한 택지개발 이제 그만”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교통사고율 전국 최고... “개선책 마련하라”

광주시의회는 15일 오후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광주시 기획관리실과 사회복지국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방세 과오납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와 교통사고 경감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방세 잘못 부과 매년 늘어 = 진선거(신당·북구1) 의원은 “광주시의 지방세 과오납 월평균 건수가 2005년 2천340건, 2006년 3천176건, 올해 9월 말 현재 4천469건으로 매년 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오납 금액 역시 2005년 56억2천만 원, 2006년 84억4천만 원, 올해 9월 말 현재 48억3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과오납 반환금 고지서 발송 유선 비용만도 올해 7천399만 원에 이르러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과오납 건수 54%, 세액으로 71% 정도가 국제 정정 등 제도상 발생한 것”이라며 “착오납부

와 소송·이의신청 패소 등의 건수를 빼면 실제 부과 착오는 1천100여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교통사고 발생 대도시 최고 = 손재홍(민주·동구2) 의원은 광주시의 자동차 주행거리 1억km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7.38건으로 전국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고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광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59.0%로 전국 평균(38.5%)이나 대도시 평균(47.4%)을 크게 웃돌면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시설 확충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교통의식 선

진화나 보행환경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 이제 그만 = 이정남(민주·광산3) 의원은 “광주시에 최근 4~5년간 인구 유입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이 계속돼 미분양 아파트가 1만세대에 이르고 일부 건설회사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택지개발 자제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현재 개발 중인 택지개발사업은 하남2지구, 수안, 선운, 진월, 효천2지구 등 5개소로 면적은 2천467만㎡, 19만여세대에 이른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향후 택지개발사업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나라당, 광주·전남 정책과제 세미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원(GSI)은 1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일류국가의 비전과 차기 정부의 광주·전남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GSI 유우의 원장이 ‘내륙수로 : 새로운 국토공간 재

편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실시하며,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광주·전남 지역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광주·전남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저성장과 저발전에 허덕이며 낙후를 거듭해왔다”며 이

를 탈피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 ▲ 광주~나주~목포로 이어지는 영산강 프로젝트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서남해안 조선산업 육성 ▲광주 문화수도 프로젝트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벨트로 육성하는 황금해안(Golden Coast) 개발 프로젝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과 지역 대학 교수 1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이어진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당 장흥군수 후보에 이명희씨

대통합민주신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2·19 장흥군수 재선거 후보에 이명희 전 장흥부군수를 확정했다.

또 기초의원 영광 나 선거구 후보에는 김영철 영광굴비농협조합장, 함평 가에는 임용수 하안나래건설 대표를 공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고건 대통령추대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주의 종각 앞에서 고건 전 총리의 대선 출마와 국민후보 추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시 GO... 고건이 희망...”

광주서 고건 前총리 대선 출마 촉구 촛불 모임...대안론 부상 주목

서울에 이어 15일 광주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의 17대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대선 출마로 보수세력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되자 범여권을 중심으로 고건 총리의 대안론과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려 주목을 끌었다.

고건 대통령추대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길·신호국)는 이날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주의 종각 앞에서 ‘고건 전 총리 대선 출마 촉구 범국민 촛불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고건 전 총리 지지자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현재 대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는 반증으로, 새로운 대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건 총리의 출마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고건 총리는 합리적 국정 철학과 풍부한 행정경험, 통합 능력과 안정된 지도력, 검증된 도덕적 청렴성을 갖췄으며 이를 통해 계층과 지역간 대립을 해소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범여권은 최근 고건 총리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은 만큼 대선 막판 범여권의 단일대오 형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잇따라 러브콜에도 고건 총리는 “지난 1월 대선 포기 선언과 함께 정치권을 떠난 사람”이라며 “현실 정치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따라서 이날 집회는 지지자들이 고건 총리의 대선 출마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건 전 총리 지지자들로 구성된 고건 대통령추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가졌으며 이번 주말과 내주 초에는 전주와 부산에서 고건 총리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중앙일보 조인스통계계가 미디어다음-R&R과 공동으로 14일 벌어진 주자고 고건 후보가 출마한다는 가정 아래 4차 가상대결을 펼친 결과 고건 총리는 22.7%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는 38.9%로서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건 후보 22.7%, 이회창 후보 16.9%, 권영길 후보 2.6% 순으로 조사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Solution Partner

자별피린 소재로 고건의 성공을 돕는 솔루션 파트너-LG화학

LG Chem